

소득 수준별 기부 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 참여 확률 및 규모 추정*

강 철 희**·박 태 근***·이 수 연****

요약

본 논문은 한국 시민의 소득에 따른 기부행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에 따른 소득수준(income level)별 시민의 기부행동을 연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의 변량과 기부행동의 변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경향이었으나, 본 논문은 시민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각 개인이 속한 소득수준을 각 개인의 가구 소득,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 구간으로 측정하면서 각 구간에 따른 기부의 참여 및 기부 규모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헤크만 선택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단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행하는 것을 넘어 소득수준별 기부행동의 양상의 경향성을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서 2011년과 2013년, 2015년의 '사회조사'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순수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별 기부참여는 시점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가구소득과 비례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 기부규모 역시 기부참여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소득과 비례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구간에 따른 기부 참여와 규모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양상과 현실과의 차이 혹은 일치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국가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시민의 기부행동을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조명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 및 심화시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기부문화 구축의 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과제가 존재하는지를 논의하는 점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적 의미도 갖는다.

주제어: 자선적 기부, 소득수준, 기부참여, 기부규모, 헤크만 선택 모형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BK21 플러스 『신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창의 융합 사회복지 인재 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주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지구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구인회, 2006; 이용재, 2012; 최경수, 2013; 강신욱, 2014; Slotte et al., 2012; Drennan, 2015; Keeley, 2015; Cappellari et al., 2016). 소득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고소득을 갖는 이들의 부가적인 사회적 기여의 책임에 대한 논의일 수 있다(Schervish, 2001).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져 온 주제인 ‘부의 복음’(gospel of wealth)은 바로 높은 소득과 축적된 자산은 개인에 의해서만 향유되어질 속성을 넘어서야만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Auten et al., 2002).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자선적 기부는 축적한 부의 기증자이고 책임의 기증자라 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반영되는 경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경향성이 존재한다면 과연 부와 자선적 기부의 연관성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는 매우 궁금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다.

경제적 상황이 다소 어둡긴 하나, 한국 사회에서 자선적 기부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는 추세이다(강철희 외, 2010).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나눔실태 조사결과’(2014)에 따르면 기부총액은 2011년 11조 1천억 원에서 2013년 12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개인기부자의 자선적 기부액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부하는 시민의 평균 기부금액 상승의 결과로 기부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강철희 외, 2015). 자선적 기부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영역 및 그 밖 영역의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의 재정을 강화하면서 정부 기능의 보완재로서 기능하는 민간영역 비영리조직들이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며 관련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민의 자선적 기부행동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이해의 확장과 구축이란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Jencks, 1987; Schervish et al., 1995; Schervish et al., 2001; Johnston, 2005; James & Sharpe, 2007)에서 소득과 기부행동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한다. 즉 기부행동을 기부 참여 및 기부 규모로 세분화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한다. 예로, 소득에 의한 자선적 기부액의 참여와 규모가 일관적인 양상을 보

이는지 혹은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한다. 둘째는 소득의 전반적인 변량과 자선적 기부행동의 전반적인 변량의 관계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강철희, 2011; Independent Sector, 2002)를 넘어, 소득의 각 수준에 따라서 기부행동이 즉 자선적 기부예의 참여와 규모가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지니는 경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선적 기부예의 참여 및 규모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소득수준에 해당되는 시민의 행동이 보다 주도적인지 그리고 기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란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소득수준에 해당되는 시민의 행동에서 더 큰 변화가 발생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참으로 이러한 이해의 구축은 한국 사회에서 자선적 기부와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과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구축하여 기부 활성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영리조직의 모금전략의 방향성 구축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기부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 자료는 시민의 소득수준별 기부 확률 및 기부 규모를 통계적으로 예측하여 제시하는데 있어 높은 신뢰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차자료(secondary data)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취지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데 있어 일정한 제약을 갖는다. 예로, 사회조사에서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최고 소득구간을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으로만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700만 원 이상에서 자료가 단절되기 때문에, 진정한 상위소득에 속하는 시민의 자선적 기부행동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이 자료는 일부 제한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2011, 2013, 2015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소득 수준별 자선적 기부행동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본 연구는 자료상의 제한성을 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항상소득 가설과 기부행동

소득수준별 기부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경제학적 이론은 Friedman(1957)의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이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소비이론인 항상소득 가설에서 Friedman은 소득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

한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불안정하며 예측이 어려운 임시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구분하면서 항상소득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즉 경제주체들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체계를 반영하여 기부 역시 소득에 기반한 소비의 한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기부에 대한 결정 역시 항상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의한다(Drollinger, 1997; Auten et al., 2002). 즉 기부행동과 관련해서 항상소득가설은 개인의 기부행동이 소득과 관련해서 소득의 어떤 하위 속성에 실질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체계라 할 수 있다.

항상소득가설을 기반으로 소득과 기부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먼저 Survey of Consumer Finance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Drollinger(1997)는 항상소득가설의 논의를 확장시켜 현재의 가구소득만이 기부의 규모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 가구소득과 함께 미래 예상소득, 자산,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한 항상소득이 기부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민 개인이 자신의 미래 재정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인지할 수록 보다 적극적인 기부행동을 행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편 횡단면자료의 제한성을 넘어 미국 국세청의 시민 개인 세금공제 패널자료에 기반해서 자선적 기부와 소득 및 세금의 관계를 분석한 Auten et al.(2002)의 연구는 세금 정책이 기부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부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고, 항상소득에서의 변화가 임시소득에서의 변화보다 기부행동에 매우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행동과 관련해서 임시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항상소득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재정패널 자료를 토대로 가구재정과 기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강철희·박태근(2014)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가구 소득 이외에도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가구의 지출 등의 기타 가구경제 변수들을 투입하여 기부행동에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통제 변수인 가구의 교육수준과 함께 가구의 총 소득이 기부 규모에 일관적으로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안정된 소득이 기부행동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2) 소득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소득수준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

소득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Reddy, 1980). 그러나 소득과 기부행동의 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과 관련해서 다음의 선행연구 정리에서 제시되듯이 연구들 간 다소 상이

한 결과를 보고한다. 전반적으로는 소득은 기부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박태규 외, 2008; 한다이, 2015; Auten et al., 2002; Bekkers & Wiepking, 2007; Choi & DiNitto, 2012; Van Slyke & Brooks, 2005; Yao, 2015). 기부행동을 세분화하며 소득의 영향력을 검증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노혜진 외(2015)의 연구는 개인의 소득이 기부금액, 기부참여율, 기부횟수 전반에 걸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외의 다수의 국내 연구들에서도 개인 소득이 기부규모 즉 기부금액에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박수변, 2006; 손원익 외, 2008; 변은지 외, 2008; 박종철 외, 2012; 구지윤, 2013; Rooney et al., 2001). 기부금액, 기부참여율, 기부횟수를 넘어 강철희(2002; 2012)는 소득 대비 기부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기부노력에도 소득이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하고, 정수영(200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기부의 정기성에도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들과는 달리 일부의 연구들에서는 소득과 기부행동 간 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향도 있고(Breeze, 2004; Wiepking, 2007; Wilhelm et al., 2008),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강철희, 2003; 박태규, 2003; Smith, 1995). 유수진(2001)의 연구에서 개인의 소득과 기부액수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 위정순(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기부참여 및 기부지속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다. 강철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과 기부 노력 즉 소득 대비 기부금의 비율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한다.

한편 Jencks(1987)의 연구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의 기부노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소득과 소득대비 기부금으로 환산한 기부노력이 U자 곡선의 형태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가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음이 보고된다(황창순, 2001; 강철희, 2003; 정정호 외, 2008; 아름다운재단, 2012; 강철희 외, 2015; Bradley et al., 2005; James, 2007). 이러한 연구는 소득수준에 따른 기부행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는데, 소득수준과 기부의 관계를 다룬 연구 중 Schervish와 Havens(2001)의 연구는 가구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부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기부금액이 보다 증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고소득수준에 속하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재정 안정도가 높을수록 기부의 규모가 증대되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고한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기부규모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들도 있다. 소득 대비 기부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부노력으로 종속변수를 한정하였을 때, 일

부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기부노력이 그 어떤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강철희, 2011; Schervish et al., 1995; Independent Sector, 2002; Johnston, 2005; James & Sharpe, 2007).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소득과 기부 간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종속변수의 설정에 따라서 즉 기부참여, 기부횟수, 기부규모, 기부노력 등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즉 향후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기부행동의 관계를 분석할 때, 기부행동을 대표하는 다양한 측정변수들을 구분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높음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전의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득의 변량과 선택된 기부행동 측정변수의 변량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경향이 큰데, 향후의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구분과 함께 그 영향력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단순한 소득 변량과 기부행동 측정변수의 변량 간 관계에 초점을 두어온 기존의 연구들의 제한점을 넘어서 시민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기부행동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과 필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하는 내용의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3)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정리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소득 혹은 소득수준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크다. 이들을 크게는 시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부관련 경험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연령(홍종필 외, 2004; 강철희 외, 2008; 강철희 외, 2009; 이상철 외, 2010; 김지혜·정익중, 2012; 오단이·김사현, 2012; 김자영·김두섭, 2013; 이창식·송국범, 2013; Van Slyke & Brooks, 2005; Bekkers et al., 2008; Choi & DiNitto, 2012; Yao, 2015; Glanville et al., 2016), 성별(김자영·김두섭, 2013; 문진주 외, 2016; Belfield & Beney, 2000; Andreoni, 2001; Van Slyke & Brooks, 2005; Mesch et al., 2011; Yao, 2015; Glanville et al., 2016), 교육수준(유수진, 2000; 손원익 외, 2008; 이상철 외, 2010; 김자영·김두섭, 2013; 문진주 외, 2016; Bekkers et al., 2008; Mesch et al., 2011; Choi & DiNitto, 2012; Glanville et al., 2016), 혼인상태(김지혜·정익중, 2012; Bekkers, 2004; Brooks, 2005; Whihelm et al., 2008; Glanville et al., 2016), 거주지역(문진주 외, 2016; Bekkers et al., 2008; Glanville et al., 2016), 주관적 계층의식(김자영·김두섭, 2013; 김창우 외, 2015), 가구의 규모(강철희·박태근, 2014; 강철희 외, 2016; 문진주 외, 2016; 송은주, 2015; Smith et al., 1995; Wiepking,

2007; Yao, 2015; Yen, 2002)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기부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은 기부관련 경험적 요인과 시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기부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논의하며 그 영향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설명 변수들 중 자원봉사 참여(김유나, 2002; 오혜진, 2002; 이상철 외, 2010; 강철희 외, 2011)와 같은 기부관련 경험적 요인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자원봉사와 기부는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형성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시민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식이 기부행동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문진주 외, 2016) 등의 변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련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변수는 기부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심리적인 안정감 혹은 행복감 등이 기부행동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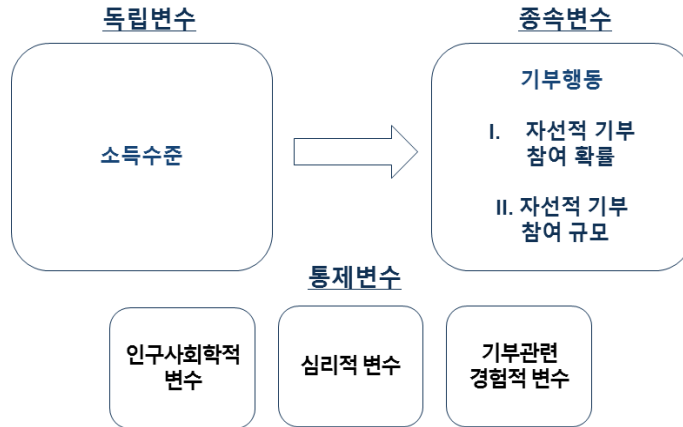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기부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즉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경제적 수준, 구체적으로는 각 개인이 위치하는 가구 소득 구간의 기부행동에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본 연구는 위에서 정리한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본 연구는 시민 개인의 가구 소득에 기반한 소득수준별 기부행동, 구체적으로는 기부참여 및 기부규모에 초점을 둔다. 기부행동에서는 종교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종교적 기부(religious giving)를 제외하고 사회를 위하여 기부 즉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에만 초점을 둔다. 또한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 요인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부 관련 경험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그림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에 대한 구분과 변수명 및 측정 방법은 [표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1] 연구모형 변수의 구분과 변수명 및 측정 방법

| 구분 | 변수명 | 측정방법 |
|-------|-------------|---|
| 종속 변수 | 자선적 기부 규모 | 6개 기부분야 각 금액의 총합으로 측정 (직접후원,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기타) |
| |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 | 현금기부 미참여 인원 = 0 (ref. group) 현금기부 참여 인원 = 1 |
| 독립 변수 | 소득수준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 1구간 (ref. group)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200만원 미만 = 2구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300만원 미만 = 3구간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400만원 미만 = 4구간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500만원 미만 = 5구간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600만원 미만 = 6구간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700만원 미만 = 7구간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 8구간 |
| 통제 변수 | 지역(광역시) | 비광역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0 (ref. group)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1 |
| | 연령 | 만 나이(연속형변수) |

[표 1] 연구모형 변수의 구분과 변수명 및 측정 방법 (표 계속)

| 구분 | 변수명 | 측정방법 |
|----|--------------------|--|
| | 가구 규모 | 가구 구성원 수(연속형 변수) |
| | 성별 | 여성 = 0 (ref. group) 남성 = 1 |
| | 교육수준 | 무학=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 졸업(전문/4년제포함)=4, 대학원 졸업(석사/박사)=5 |
| | 혼인상태 | 미혼=0 (ref. group) 배우자 있음=1 혼인 경험 있으나 배우자 없음(이혼, 사별)=2 |
| | 주관적 만족감 | 경제, 직업, 건강 측면을 고려한 현재 생활에서의 만족감 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 5 points Likert |
| | 계층의식 (사회경제적 지위) |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정도를 측정 1= 하(하) / 2=하(상) / 3=중(하) / 4=중(상) / 5=상(하) / 6=상(상) |
| | 계층이동가능성 |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위계층으로의 이동가능성 매우 낮다(1) ~ 매우 높다(5). 5 point Likert |
| | 자원봉사 참여여부 | 자원봉사 미참여=0 (ref. group) 자원봉사 참여=1 |

먼저 종속변수인 자선적 기부행동에서 기부의 규모에 대한 측정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분야 기부금에 대해 총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를 통한 자선적 기부는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자선적 활동을 위한 특별헌금이나 구제헌금 및 보시 등의 속성을 갖기에 자선적 기부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 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선적 기부 규모의 연도별 직접 비교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디플레이터¹⁾를 적용하여 2011년을 기준으로 2013년과 2015년의 자선적 기부 규모에 하향 조정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에 대한 측정은 위에서 기술한 방식을 통해 기부금의 규모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그리고 기부금의 규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기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측정하였다.

1) 2011년 = 101.585 / 2013년 = 103.521 / 2015년 = 106.443 (기준연도 2010년=100)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소득수준 범주에 대한 설정은 사회조사에서 시민 개인 각각이 사회조사 질문에서 응답한 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여 각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8개 구간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그룹(1구간)을 비교를 위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후의 100만 원 한도 차이 방식으로 설정된 6개 그룹 그리고 700만 원 이상에서 정보가 단절되는 방식으로 측정된 1개 그룹(8구간)으로 그대로를 반영하는 방식, 즉 8개의 가구소득 범주들 그대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의 측정은 [표 1]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기부관련 경험적 요인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의 경우에는 사회조사에서 측정된 자원봉사 시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시간을 갖는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을 갖지 않은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즉 여부의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있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는 2008년부터는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2011년 조사부터는 사회참여 부문 중 기부 및 자원봉사 항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사회조사』는 시민 개인의 기부행동을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하고 대표성이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의 『사회조사』 자료 중 본 연구는 기부행동이 측정된 2011년, 2013년, 2015년 자료를 활용하면서 연도별 비교의 방식을 통해 소득구간 별 기부행동의 양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했다. 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독립적 경제활동의 영위가 제한되어 기부행동 역시도 독립적으로 수행되는데 제한성을 가질 수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연도별 『사회조사』의 표본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규모 및 본 연구의 실제 대상이 되는 19세 이상 시민의 규모는 [표 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2] 각 연도별 분석대상

| 구분 | 2011 사회조사 | 2013 사회조사 | 2015 사회조사 |
|------------------|----------------------------|----------------------------|----------------------------|
| 원 자료 표본 수 | 전국 17,112 가구 38,012 가구원 | 전국 17,644 가구 37,648 가구원 | 전국 18,576 가구 39,282 가구원 |
| 만 19세 미만 표본 수 | 전국 4,185 명 | 전국 3,510 명 | 전국 3,320명 |
| 분석 대상 표본 수 | 전국 만 19세 이상 33,827 명 | 전국 만 19세 이상 34,138 명 | 전국 만 19세 이상 35,962 명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서 먼저 종속변수인 기부 참여 및 규모, 독립변수인 소득수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자원봉사참여 변수에 대해서는 기술적 통계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분포 및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검증,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별 기부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Heckman 선별 모형을 활용하였다. 기부행동에 대한 분포를 보면,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부행동에 대한 결측값이 관찰되는 경우가 전체 표본의 7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수준과 기부행동의 관계, 특히 소득수준과 자선적 기부규모의 관계 파악에서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될 때 자선적 기부규모 값을 지니는 사례만을 사용하여 70% 내외의 표본은 관계의 분석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여 관계가 과대추정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선택의 내생성(endogeneity)을 교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Heckman 선별모형(Heckman selection model)²⁾을 활용하였다. Heckman의 선별모형을 통해 먼저 프로빗(probit) 분석방식을 통해 자선적 기부참여에 대한 관계를 추정 후, 선택의 편의 문제를 교정하는 값인 mills ratio를 반영하는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을 통해 기부 규모에 대한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Heckman 선별모형도 비선형(non-linear)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기부 참여에 대한 1단계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와 기부 규모에 대한 2단계 최소자승법(OLS) 방식의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사후분석에서 한계값(예측값, margins)을 추정함을 통해 각 소득수준별 기부확률 및 기부규모를 비교해 보았다. 한편 Heckman 선별모형 자체는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에 대한 1단계 분석과 자선적 기부 규모에 대한 2단계 분석에서 설명 변수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모형의 수렴 상 문제를 가질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계층이동의 가능

2) 선택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은 그의 논문(Heckman, J., 1977)을 참고하였다.

성 변수에 대해서만 차이를 설정하였다. 즉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변수가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2단계 분석에서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 변수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정된 설명변수 중 소득과 관련될 수 있는 변수 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증을 실시하였다. VIF값들이 모두 10보다 작고, 평균값이 1과 큰 차이가 없으며, 1/VIF값에서 모두 0.1 보다 큰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민인식, 2012), [표 3]의 결과를 통해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 변수 | 2011년 자료 | | 2013년 자료 | | 2015년 자료 | |
|-------------|----------|----------|----------|----------|----------|----------|
| | VIF | 1/VIF | VIF | 1/VIF | VIF | 1/VIF |
| 연령 | 1.67 | 0.600226 | 1.70 | 0.587814 | 1.59 | 0.627396 |
| 교육수준 | 1.61 | 0.619662 | 1.54 | 0.647939 | 1.51 | 0.661331 |
| 주관적 만족감 | 1.53 | 0.653560 | 1.52 | 0.657877 | 1.48 | 0.673607 |
| 계층의식 | 1.40 | 0.715137 | 1.44 | 0.692414 | 1.37 | 0.729726 |
| 계층이동 가능성 인지 | 1.34 | 0.747977 | 1.26 | 0.795160 | 1.26 | 0.794991 |
| 소득수준 | 1.10 | 0.910104 | 1.10 | 0.906846 | 1.11 | 0.904947 |
| 가구 규모 | 1.08 | 0.926709 | 1.09 | 0.917012 | 1.09 | 0.921407 |
| Mean VIF | 1.39 | | 1.38 | | 1.34 | |

4.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1) 종속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 및 규모에 대한 연도별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표 5]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4] 종속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기부 참여여부)

| 구분 | 2011년 | | 2013년 | | 2015년 | |
|--------|----------|----------|----------|----------|----------|----------|
| | 빈 도 | 백구간 | 빈 도 | 백구간 | 빈 도 | 백구간 |
| 기부 미참여 | 22,475 명 | 66.44 % | 22,955 명 | 67.24 % | 26,394 명 | 73.39 % |
| 기부 참여 | 11,352 명 | 33.56 % | 11,183 명 | 32.76 % | 9,568 명 | 26.61 % |
| 총 계 | 33,827 명 | 100.00 % | 34,138 명 | 100.00 % | 35,962 명 | 100.00 % |

[표 5] 종속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기부 규모)

| 구분 | 2011 사회조사 | | 2013 사회조사 | | 2015 사회조사 | |
|--------|-----------|-----------|-----------|---------|-------------|-----------|
| | 평균기부금 | 표준편차 | 평균기부금 | 표준편차 | 평균기부금 | 표준편차 |
| 전체 인원 | 61,676 원 | 360,879.3 | 67,565 원 | 378,775 | 83,594 원 | 425,457.1 |
| 기부 참여자 | 183,785 원 | 604,692.9 | 206,253 원 | 639,834 | 314,194.8 원 | 779,707.7 |

자선적 기부예의 전반적인 참여 경향을 보면, 2011년 약 33.6%에서 2013년 약 32.8%로 소폭 감소 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약 26.7%로 전년대비 약 6%의 폭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상을 고려하여 자선적 기부의 평균 규모를 보면, 2011년의 가치로 고정할 경우 2011년 약 6만 2천 원에서 2013년 약 6만 8천원으로 약 6,000원 가량 소폭 상승하였고, 2015년의 경우 약 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16,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규모를 기부예 참여인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 2011년 약 18만 4천원에서 2013년 약 20만 6천 원으로 약 2만 2천 원 가량 상승하였고, 2015년의 경우 약 3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1만 원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행동에서 참여는 줄어드나 규모는 증가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2)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핵심 독립변수로 투입한 소득수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6]과 [표 7]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소득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 및 평균 참여 규모도 각각 분석하여 전년 대비 증감을 함께 정리하였다.

소득수준별 기부 참여 경향을 보면, 두 가지 특성이 파악된다. 첫째는 소득수준이 증가 할수록 기부 참여율도 함께 증가되는 양상이 파악된다. 2011년의 경우 최저 구간인 100만원 미만 그룹은 약 17.3%의 참여에 그친 반면 본 연구의 분류 상 최상 구간인 700만 원 이상 구간의 경우 약 54.9%로 최

저 구간에 비해 3배가 넘는 참여율을 보인다. 2011년 자선적 기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율인 33.56% 이상의 참여율을 갖는 경우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상부터이고, 2013년 자선적 기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율인 32.76% 이상의 참여율을 갖는 경우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부터이며, 2015년 자선적 기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율인 26.61% 이상의 참여율을 갖는 경우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자선적 기부참여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1년에 비해 2013년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파악된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전 소득구간에 걸쳐 기부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파악된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반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기부 참여)

| 구분 (단위: %, 명) | 2011년 | | 2013년 | | 2015년 | |
|----------------------------|------------------------|--|------------------------|-------|------------------------|--------|
| | 참여율 | | 참여율 | 증감 | 참여율 | 증감 |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 17.32 (1,103/6,369) | | 17.21 (1,101/6,397) | -0.11 | 12.16 (747/6,145) | -5.05 |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 26.04 (2,073/7,960) | | 24.81 (1,845/7,436) | -1.23 | 18.45 (1,395/7,563) | -6.36 |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300만원 미만 | 36.27 (2,797/7,711) | | 32.07 (2,398/7,477) | -4.2 | 24.59 (1,809/7,357) | -7.48 |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400만원 미만 | 41.93 (2,099/5,006) | | 38.46 (2,069/5,380) | -3.47 | 30.23 (1,681/5,560) | -8.23 |
|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500만원 미만 | 44.89 (1,470/3,275) | | 45.65 (1,518/3,325) | +0.76 | 35.85 (1,390/3,877) | -9.8 |
|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600만원 미만 | 49.03 (812/1,656) | | 51.77 (948/1,831) | +2.74 | 43.06 (937/2,176) | -8.71 |
|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700만원 미만 | 52.6 (385/732) | | 55.84 (507/908) | +3.24 | 43.71 (570/1,304) | -12.13 |
|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 54.83 (613/1,118) | | 57.59 (797/1,384) | +2.76 | 52.47 (1,039/1,980) | -5.12 |
| 총 계 | 33.56 | | 32.76 | -0.8 | 26.61 | -6.15 |

[표 7]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기부 규모)

| 구분 (단위: 원) | 전체 인원 | | | | | 기부 참여자 | | | | | | |
|-------------------------|---------|---------|------------|---------|------------|---------|---------|------------|---------|------------|------|--|
| | 2011 | | 2013 | | 2015 | | 2011 | | 2013 | | 2015 | |
| | 평균 | 평균 | 증감 (전년) | 평균 | 증감 (전년) | 평균 | 평균 | 증감 (전년) | 평균 | 증감 (전년) | | |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 11,597 | 14,152 | 2,556 | 16,488 | 2,336 | 66,963 | 82,228 | 15,266 | 135,635 | 53,407 | | |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200만원 | 27,985 | 33,859 | 5,874 | 36,194 | 2,335 | 107,458 | 136,465 | 29,006 | 196,227 | 59,762 | | |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300만원 | 51,313 | 52,795 | 1,482 | 60,042 | 7,247 | 141,464 | 164,615 | 23,151 | 244,183 | 79,569 | | |
|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400만원 | 71,165 | 78,929 | 7,765 | 94,421 | 15,491 | 169,724 | 205,240 | 35,516 | 312,302 | 107,062 | | |
|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500만원 | 95,398 | 92,216 | -3,182 | 109,372 | 17,156 | 212,537 | 201,989 | -10,548 | 305,061 | 103,072 | | |
|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600만원 | 124,448 | 127,093 | 2,644 | 175,422 | 48,329 | 253,801 | 245,471 | -8,330 | 407,383 | 161,912 | | |
|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700만원 | 196,605 | 191,263 | -5,342 | 171,524 | -19,739 | 373,805 | 342,539 | -31,267 | 392,400 | 49,861 | | |
|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 335,735 | 312,022 | -23,713 | 320,724 | 8,702 | 612,320 | 541,830 | -70,490 | 611,197 | 69,367 | | |
| 총 계 | 61,676 | 67,565 | 5,888 | 83,594 | 16,029 | 183,785 | 206,253 | 22,468 | 314,195 | 107,942 | | |

소득수준별 기부 규모의 경향을 보면, 역시 두 가지의 특성이 파악된다. 첫째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선적 기부의 평균 규모가 증가되는 양상이 파악된다. 전체 대상에 초점을 두고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비교집단인 최저 그룹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평균 2만원 미만의 수준을 보였으며 소득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월평균 400만 원~500만 원의 경우에는 10만원 전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500만 원~700만 원에 해당되는 두 그룹의 경우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2만 원~19만 원으로 20만 원 미만의 수준을 보였으며, 최상위 그룹인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그룹의 경우 약 32만 원의 규모로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부에 참여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부규모를 비교했을 때, 그 편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100만에서 400만원 미만의 경우까지는 10만 원대, 월평균 소득 4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의 경우까지는 20만 원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7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30만 원대, 700만 원 이상인 경우 60만 원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자선적 기부의 규모의 상승에 있어 2015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상승의 핵심에는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600만 원 그룹의 기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500만 원 그룹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득 그룹간의 기부규모의 변화와 관련해서 전체 대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대의 경우 4만 8천 원 상승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대의 경우 1만 5천 원 상승하였다. 이들 소득 그룹 중 기부에 참여한 인원으로 한정해서 분석해 보면, 이전 대비 10만 원 이상이라는 가장 큰 폭에서 기부규모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소득그룹 및 최고 소득그룹에 대한 표집 제한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중간 정도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갖는 시민들의 기부규모 상승에의 기여가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을 갖는 시민들의 상승에의 기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통제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8]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자원봉사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참여의 비율은 2011년과 2013년에는 약 13%이었으나, 2015년에는 12%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갖는다. 평균적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의 평균은 중간의 수준 즉 보통의 수준이다. 그리고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그 평균은 2.6으로 중하층보다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2.6 정도로서 ‘낮다’와 ‘중간이다’의 사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원의 수로 측정된 가구 규모는 평균 2.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통제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 구 분 | 2011년 | | | 2013년 | | | 2015년 | | |
|-----------|--------|--------|--------|--------|--------|--------|--------|--------|--------|
| | 광역시 | 비광역시 | | 광역시 | 비광역시 | | 광역시 | 비광역시 | |
| 지역 | 46.52% | 53.48% | | 46.76% | 53.24% | | 43.94% | 56.06% | |
| | | | | | | | | | |
| 성별 | 여성 | 남성 | | 여성 | 남성 | | 여성 | 남성 | |
| | 53.27% | 46.73% | | 53.05% | 46.95% | | 52.89% | 47.11% | |
| 자원봉사 참여여부 | 미참여 | 참여 | | 미참여 | 참여 | | 미참여 | 참여 | |
| | 86.88% | 13.12% | | 86.98% | 13.02% | | 87.62% | 12.38% | |
| 혼인 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미혼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미혼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18.10% | 68.42% | 13.48% | 17.94% | 68.16% | 13.90% | 18.72% | 66.92% | 14.36% |

[표 8] 통제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표 계속)

| 구 분 | 2011년 | | 2013년 | | 2015년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연령(continuous) | 48.03 | 16.38 | 49.07 | 16.73 | 49.94 | 17.07 |
| 교육수준(5 point) | 3.08 | 0.97 | 3.09 | 0.98 | 3.12 | 0.98 |
| 주관적 만족감(5 point) | 2.90 | 0.93 | 3.14 | 0.96 | 3.15 | 0.93 |
| 계층의식(6 point) | 2.62 | 1.03 | 2.60 | 1.04 | 2.64 | 1.05 |
| 계층이동가능성(5 point) | 2.61 | 1.10 | 2.61 | 1.11 | 2.44 | 1.08 |
| 가구 규모(가구 구성원 수) | 2.36 | 0.96 | 2.29 | 0.93 | 2.31 | 0.94 |

2) 소득수준별 기부행동에 대한 헤크만 선별 모형 분석결과

다음에서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부 참여와 기부 규모로 나누어 헤크만 선별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분석결과는 다음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1) 자선적 기부 참여에 대한 헤크만 선택 모형 1단계 분석(Probit Analysis)의 결과

자선적 기부 참여에 대한 헤크만 선택 모형 1단계 분석 즉 프로빗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9]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9] 자선적 기부참여에 대한 헤크만 선택모형 분석결과(1-stage)

| 구 분 | 2011년 | | 2013년 | | 2015년 | |
|---------------|-------------|----------|-------------|----------|-------------|----------|
|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 지역(ref. 비광역시) | .0610458 | 4.03*** | .1664169 | 10.94*** | .0686229 | 4.42*** |
| 성별(ref. 여성) | .189765 | 12.20*** | .226442 | 14.54*** | .1139592 | 7.21*** |
| 연령 | .0051359 | 6.78*** | .0087376 | 11.67*** | .0095602 | 12.70*** |
| 교육수준 | .2727543 | 23.75*** | .2628295 | 22.96*** | .2833433 | 24.84*** |
| 혼인상태(ref. 미혼) | | | | | | |
| 배우자 있음 | .4765463 | 18.55*** | .2575438 | 10.17*** | .1777583 | 6.87*** |
| 배우자 없음 | .4104391 | 10.81*** | .2154831 | 5.79*** | .1373503 | 3.64*** |

[표 9] 자선적 기부참여에 대한 헤크만 선택모형 분석결과(1-stage) (표 계속)

| 구 분 | 2011년 | | 2013년 | | 2015년 | |
|-------------------------|-------------|-----------|-------------|-----------|-------------|-----------|
|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 주관적 만족감 | .09773 | 10.52*** | .0810802 | 9.08*** | .0939067 | 10.07*** |
| 계층의식 | .086544 | 9.31*** | .1212313 | 13.35*** | .1167903 | 13.00*** |
| 계층이동(상승)가능성 인지 | .0085914 | 1.22 | .0254174 | 3.60*** | .0024428 | 0.33 |
| 자원봉사참여(ref. 미참여) | .65217 | 30.15*** | .7056114 | 32.53*** | .8113914 | 37.64*** |
| 소득수준(ref. 100만 미만, 1구간) | | | | | | |
| 100만~200만 미만(2구간) | .1914949 | 7.14*** | .1923014 | 7.15*** | .1952614 | 6.73*** |
| 200만~300만 미만(3구간) | .3688758 | 12.74*** | .3150923 | 11.01*** | .3148894 | 10.24*** |
| 300만~400만 미만(4구간) | .4436471 | 13.80*** | .4036018 | 12.81*** | .4136522 | 12.45*** |
| 400만~500만 미만(5구간) | .4518749 | 12.58*** | .535839 | 15.19*** | .5169546 | 14.45*** |
| 500만~600만 미만(6구간) | .5070318 | 11.63*** | .609157 | 14.67*** | .652731 | 15.95*** |
| 600만~700만 미만(7구간) | .5199269 | 9.11*** | .7083424 | 13.50*** | .631513 | 13.24*** |
| 700만 이상(8구간) | .567642 | 11.36*** | .6357635 | 13.72*** | .7550158 | 17.61*** |
| 가구 구성원 수 | -.1397863 | -15.34*** | -.1232658 | -13.21*** | -.1083095 | -11.53*** |
| mills lambda | 1337734 | 6.01*** | 1066185 | 6.97*** | 716171.4 | 3.82*** |
| rho | 1.00000 | | 1.00000 | | 0.74599 | |
| sigma | 1337734.3 | | 1066185.4 | | 960025.21 | |

* p<0.05; ** p<0.01; *** p<0.001

먼저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관계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리해 보면, 먼저 소득수준의 경우 비교집단으로 투입된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에 비해 상위 구간에 속해 있는 경우 전 구간에 걸쳐 모두 자선적 기부 참여의 확률은 일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지역에서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선적 기부참여의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변수의 경우 남성인 경우 기부참여의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참여의 확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규모의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기부 참여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미혼 집단에 비해 현재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혼인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선적 기부참여의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이 자각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의식의 경우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참여의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이동 상승 가능성 인지는 정적인 방향에서의 관계를 제시하는 2013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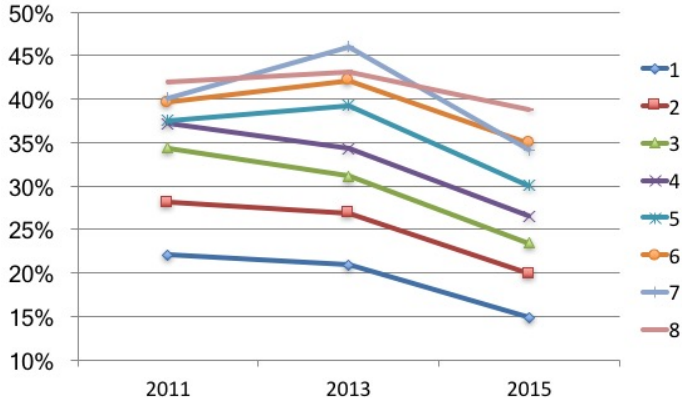
한편 심리적 변수인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의 경우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참여의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부관련 경험적 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변수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선적 기부참여의 확률은 일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 참여에 대한 소득수준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한계값(예측값, margins)을 추정하여 구간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과 [그림 2]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소득 수준별 기부확률을 토대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수준별 기부확률은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 기부참여의 확률은 약 22%이고, 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약 42%로 대략 2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 기부참여의 확률은 약 21%이고, 700만원 이상이 아닌 600만원에서 700만원 미만의 경우에 가장 높은 46%로 대략 25%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 기부참여의 확률은 약 15%로 급격히 저하되고, 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약 39%로 대략 24%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소득 수준별 기부참여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

| 구 분 | 2011년 | 2013년(전년 대비 증감) | | 2015년(전년 대비 증감) | |
|------------------|-------|-----------------|-------|-----------------|--------|
| 100만원 미만(1구간) | 22 % | 21 % | - 1 % | 15 % | - 6 % |
| 100만~200만미만(2구간) | 28 % | 27 % | - 1 % | 20 % | - 7 % |
| 200만~300만미만(3구간) | 34 % | 31 % | - 3 % | 23 % | - 8 % |
| 300만~400만미만(4구간) | 37 % | 34 % | - 3 % | 27 % | - 8 % |
| 400만~500만미만(5구간) | 38 % | 39 % | + 2 % | 30 % | - 9 % |
| 500만~600만미만(6구간) | 40 % | 42 % | + 3 % | 35 % | - 7 % |
| 600만~700만미만(7구간) | 40 % | 46 % | +6 % | 34 % | - 12 % |
| 700만 이상(8구간) | 42 % | 43 % | + 1 % | 39 % | - 4 % |

[그림 2] 소득 수준별 기부참여 확률 변화



기부참여와 관련한 소득수준과 연도별 변화의 경향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부참여에서 모든 소득수준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1구간~4구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3년과 2015년에 지속적인 감소세가 확인함을 인식할 수 있다. 5구간~8구간의 경우 2013년은 201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5년에 전반적으로 1구간~4구간과 유사한 폭에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침체 및 불안정성에 따른 대응 행동인 것으로 이해된다.

(2) 자선적 기부 규모에 대한 헤크만 선택 모형 2단계 분석(OLS 회귀분석)의 결과

자선적 기부 규모에 대한 헤크만 선택 모형 2단계 분석 즉 OLS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10]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한 헤크만 선택모형 분석결과(2-stage)

| 구 분 | 2011년 | | 2013년 | | 2015년 | |
|---------------|-------------|---------|-------------|----------|-------------|---------|
|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 지역(ref. 비광역시) | 47402.98 | 2.15* | 60882.96 | 2.61** | 15347.7 | 0.79 |
| 성별(ref. 여성) | 190786.3 | 5.48*** | 175895.5 | 6.23*** | 77616.78 | 3.36** |
| 연령 | 9191.963 | 7.40*** | 11875.01 | 10.08*** | 11304.93 | 7.72*** |
| 교육수준 | 305759.6 | 7.22*** | 263647.8 | 9.17*** | 222827.1 | 5.83*** |

[표 10]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한 헤크만 선택모형 분석결과(2-stage) (표 계속)

| 구 분 | 2011년 | | 2013년 | | 2015년 | |
|-------------------------|-------------|----------|-------------|----------|-------------|----------|
|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Coefficient | z |
| 혼인상태(ref. 미혼) | | | | | | |
| 배우자 있음 | 401107 | 4.93*** | 145447.7 | 3.83*** | 52981.2 | 1.39 |
| 배우자 없음 | 371119.4 | 4.61*** | 97540.88 | 2.15* | 98178.19 | 2.06* |
| 주관적 만족감 | 106351.2 | 5.62*** | 77000.36 | 5.98*** | 99410.56 | 6.17*** |
| 계층의식 | 115159.1 | 6.25*** | 140596.2 | 8.53*** | 109438.6 | 5.90*** |
| 자원봉사참여 (ref. 미참여) | 625901.4 | 6.68*** | 560015.3 | 7.98*** | 458840.7 | 4.58*** |
| 소득수준(ref. 100만 미만, 1구간) | | | | | | |
| 100만~200만 미만(2구간) | 253573.8 | 5.06*** | 213127.7 | 5.69*** | 185461.1 | 3.95*** |
| 200만~300만 미만(3구간) | 444098.5 | 6.05*** | 325013 | 6.81*** | 291366.6 | 4.87*** |
| 300만~400만 미만(4구간) | 517481.9 | 6.15*** | 408078.7 | 7.24*** | 395268.6 | 5.50*** |
| 400만~500만 미만(5구간) | 534104 | 6.19*** | 479940 | 6.98*** | 424654.2 | 5.06*** |
| 500만~600만 미만(6구간) | 588280.5 | 6.13*** | 529257.5 | 6.94*** | 552644.8 | 5.56*** |
| 600만~700만 미만(7구간) | 689526.8 | 6.53*** | 673204.9 | 7.67*** | 502682.2 | 5.06*** |
| 700만 이상(8구간) | 939027.4 | 9.04*** | 773824.1 | 9.93*** | 728909.4 | 6.81*** |
| 가구 구성원 수 | -144491.4 | -5.98*** | -111774.5 | -7.00*** | -71231.45 | -4.07*** |
| mills lambda | 1337734 | 6.01*** | 1066185 | 6.97*** | 716171.4 | 3.82*** |
| rho | 1.00000 | | 1.00000 | | 0.74599 | |
| sigma | 1337734.3 | | 1066185.4 | | 960025.21 | |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한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관계의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자선적 기부규모에 일관적으로 동일한 방향에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성별은 남성인 경우에 기부규모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미혼 집단에

비해 현재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혼인의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자선적 기부규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규모의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 수록 기부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자각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구간의식의 경우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규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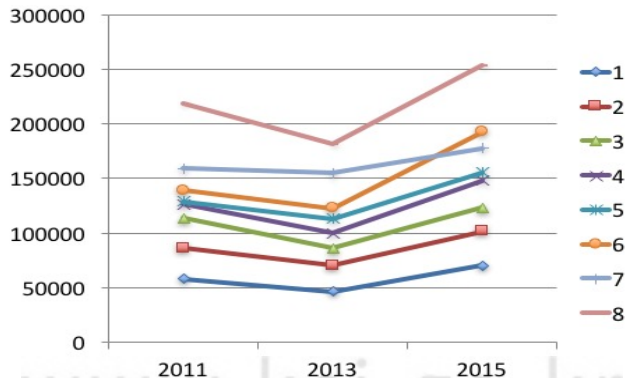
심리적 변수인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의 경우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자선적 기부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관련 경험적 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변수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자선적 기부규모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 규모에 대한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력과 관련해서 다른 변수의 값을 모두 평균값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을 통해 추정된 한계값(margins)에 초점을 맞춰 소득 수준간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1]와 [그림 3]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11] 소득 수준별 기부 규모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

| 구 분 | 2011년 | 2013년(전년 대비 증감) | 2015년(전년 대비 증감) |
|------------------|-----------|----------------------|----------------------|
| 100만원 미만(1구간) | 58,206 원 | 46,461 원 - 11,745 원 | 70,374 원 + 23,913 원 |
| 100만~200만미만(2구간) | 86,190 원 | 70,226 원 - 15,964 원 | 101,244 원 + 31,018 원 |
| 200만~300만미만(3구간) | 113,753 원 | 86,207 원 - 27,546 원 | 123,144 원 + 36,937 원 |
| 300만~400만미만(4구간) | 126,089 원 | 99,864 원 - 26,225 원 | 148,011 원 + 48,148 원 |
| 400만~500만미만(5구간) | 129,025 원 | 113,016 원 - 16,010 원 | 155,690 원 + 42,674 원 |
| 500만~600만미만(6구간) | 138,973 원 | 122,803 원 - 16,170 원 | 192,650 원 + 69,847 원 |
| 600만~700만미만(7구간) | 159,171 원 | 155,164 원 - 4,008 원 | 177,527 원 + 22,364 원 |
| 700만 이상(8구간) | 218,649 원 | 181,379 원 - 37,270 원 | 253,493 원 + 72,114 원 |

[그림 3] 소득 수준별 기부규모 변화



추정된 한계값을 토대로 소득 수준별 자선적 기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별 개인의 기부규모는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1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 기부규모는 약 5만 8천 원이고, 7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약 21만 9천 원으로 약 16만 원 정도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 기부규모는 약 4만 6천 원이고, 7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약 18만 1천 원으로 약 13만 5천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 기부규모는 약 7만 원이고, 7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약 25만 3천 원으로 18만 3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의 단위를 개인 수준에 초점을 두고 한계값 추정을 통해 가구소득에 기반한 소득구간별 자선적 기부규모의 차이에 주목해 보면, 그 차이는 소득의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기부규모의 변화 양상을 보면, 7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에 속한 개인들의 기부규모에서의 변동이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 구간에 걸쳐 2013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자선적 기부규모가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2013년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감소 추이에서 가장 주목되는 소득구간은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속한 개인들로 이들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상승에서 가장 주목되는 소득구간은 월 소득 500만 원~600만 원과 700만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속한 개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자선적 기부행동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소득수준별 기부확률은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 기부참여의 확률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규모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규모가 더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가구소득의 차이에 비례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기부규모의 변화양상에서는 7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에 속한 개인들의 기부규모에서의 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즉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과 기부의 관계는 다양한 논의를 파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과연 한국 사회에서 소득 구간에 따른 시민 개인의 자선적 기부행동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는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관심을 토대로 본 연구는 2011년, 2013년, 2015년도 ‘사회조사’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며 소득의 변량과 기부행동의 변량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를 넘어 소득 수준별 시민 개인의 자선적 기부행동을 기부 참여와 기부 규모로 세분화시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른 시민 개인의 자선적 기부행동 상의 차이가 즉 기부참여에 있어서의 차이와 기부규모에 있어서의 차이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도모해 보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해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자선적 기부참여 및 규모와 관련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기부참여 및 기부규모 모두에 있어 정의 방향에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 수준별 시민 개인의 기부 참여의 확률에 대한 한계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 확률은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와 700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2011년, 2013년, 2015년의 경우 약 14%에서 20%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경제적 역량에 따른 개인의 자선적 기부 참여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선적 기부 규모에서도 그러한 양상은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시민 개인의 기부 규모에 대한 한계 값을 분석한 결과, 2011년, 2013년, 2015년의 경우 약 13만 원에서 16만 7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경제적 역량에 따른 개인의 자선적 기부 규모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에 대한 일관된 전반적인 방향성은 Schervish et al.(2001)의 연구 그리고 다른 선행연구(Choi & DiNitto, 2012; Yao, 2015)에서 보고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자선적 행동에서 소득에 따른 보편적 차이의 경향성은 일관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선적 기부 참여 및 규모와 관련해서 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대응 양상이 소득 수준 간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자선적 기부 참여에 대한 한계 값 분석을 토대로 시민 개인의 기부 참여의 양상을 보면, 2013년에는 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에 참여의 비율이 공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2015년에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일관적으로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축소의 경향성에서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에만 -3.9%에 그치고, 그 이외의 모든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축소의 비율이 -6.7%에서 -11.3%까지 매우 일관적인 양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선적 기부 규모의 양상에서는 2013년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기부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고, 700만 원 이상이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시민 개인의 감소폭이 3만 4천 원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에는 자선적 기부 참여의 비율은 일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이와는 다르게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전 소득 수준에 걸쳐 일관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득 500만 원~600만 원 구간에 속한 개인 기부규모의 상승과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의 구간에 속한 개인 기부규모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선적 기부 참여와 규모에서의 양상이 반대되는 방향에서 전개되는 현상은 자선적 기부를 행해 온 일부 시민들의 기부에의 몰입 양상이 참여에서의 일반적 축소와는 관계없이 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핵심적 결과에 기반을 둘 때, 자선적 기부 참여 및 규모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전개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향성을 놓고 볼 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데 그 차이는 자선적 기부에의 참여에서 그러한 양상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자선적 기부규모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 차이가 정비례적이지는 않은 경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기부 선진국에서는 정비례적 관계보다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설,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선적 기부 노력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 (Schervish et al., 1995; Independent Sector, 2002; Bradley et al., 2005; Johnston, 2005; James, 2007; James & Sharpe, 2007)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고소득층에 속한 개인들의 기부규모가 과연 정비례함의 관계 혹은 U자형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야기한다. 즉 가장 높은 소득수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낮은 소득수준에 비해 가구소득에 상응해서 보다 큰 규모에서 기부하지는 않는 경향성이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제시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수준과 관련된 시민 개인의 기부의 노력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가 지니는 과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에 어떠한 연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진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제한성을 갖는다. 특히 각 개인의 소득 수준을 구분함에 있어 원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가구 소득 구간에 국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

소의 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최상위 소득수준으로 구분된 월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에 속한 개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단절(truncated)되어 동일 집단으로 처리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 범주에 속한 시민 개인의 기부행동을 국내 최초로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자료에 따른 연구의 제한성을 상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자본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부와 사회적 기여의 관계 현상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관련 연구를 통해서 소득 및 자산의 규모에 따른 개인의 기부행동 양상에 대해 지속적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면서 사회적 변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자선적 기부 규모에서의 기여도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내면서 기부의 저변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위치에 맞는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전개될 수 있게 하는 촉진의 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이러한 향후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 외에도 기부 혜택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같은 제도적 요인들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송헌재, 2013; 송은주, 2015; List, 2011)에서는 세금공제의 혜택이 갖는 효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영향력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접근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어졌는데,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소득의 수준별로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 정책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득 수준에 초점을 두고 시민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구축 및 논의의 기반 마련을 이뤄 보고자 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한국 사회 내 시민 개개인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 및 확장됨과 동시에 보다 건강한 기부문화가 한국 사회에 구축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강철희(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 강철희, 김유나(2003). 온라인 기부에 관한 연구-기부행동과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 123-164.
- 강철희, 주명관(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1-38.
- 강철희, 고언정, 정혜영(2009). 기부노력에 대한 기부동기와 기부대상 인지매체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215-254.
- 강철희, 이성규, 이상철, 조주희(2010). 구간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행 강화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위원회 2010-5.
- 강철희, 조승중, 안성호(2011). 저소득층의 기부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88-120.
- 강철희, 최명민, 김수연(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 및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 강철희, 박태근(2014). 가구재정 지표와 기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부영역에 따른 비교. 사회복지정책. 41(3), 1-25.
- 강철희, 편창훈, 오장용(2015). 가구 단위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의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완재(complement) vs. 대체재(substitute) 검증. 한국사회정책. 22(2), 195-226.
-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구지윤(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단일호), 93-122.
- 김자영, 김두섭(2013). 주관적 구간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401-430.
- 김지혜, 정익중(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133-158.
- 김창우, 김진미(2015). 베이비붐 세대의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이전 및 이후세대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단일호), 271-305.
- 노혜진, 강철희, 김교성, 민인식(2015).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5(3), 1.
- 문진주, 홍기용(2016).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7(1), 199-220.
- 박수범(2006).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5, 137-162.
- 박종철, 이용운(2012). 소득수준과 자아해석 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경영연구. 14(2), 107-124.
- 박태규(2003). 기부문화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 박태규, 윤병호, 정진욱(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변은지, 이종은, 이경은(2008). 우리나라 부유층의 기부 수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 137-167.
- 보건복지부(2014). 나눔실태 2014.
- 서울사회경제연구소(2014). 소득불평등 해소의 길. 경기: 한올아카데미
- 손원익, 박태규(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송은주(2015).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2(4), 167-198.
- 송헌재(2013).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6(4), 151-178.
- 아름다운재단(2012). Giving Korea 2012. 서울: 아름다운북.
- _____ (2014). Giving Korea 2014. 서울: 아름다운북.
- 오단이, 김사현(201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활동의 관계에 관한 소연구: 공공복지 인식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2), 61-84.
- 오혜진(2002). 자선적 기부참여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기부금액 및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정순(2002). 사회복지기관 후원자의 후원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수진(2000). 기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철, 홍환, 박언하(2010). 정기적 기부 및 자원봉사 제고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117-149.
- 이성균, 신광영, 조돈문(2007).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서울: 집문당
- 이용재(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국민 의료이용. 서울: 집문당
- 이창식, 송국범(2013). 청소년의 기부와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725-734.
- 정수영(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호, 김미희(2008). 기부중단자의 특성 및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단일호), 241-266.
- 최경수(2013).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능적 분배 및 제도부문별 소득구조 변화의 영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한다이, 김석은(2015).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5, 1-25.
- 현외성(2013). 자원봉사론 강해. 서울: 학지사.
- 홍종필, 김유경(2004).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 행동 촉진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효과에 관한 연구: e-카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8(1), 256-301.
- 황창순, 강철희(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 33-73.

황창순(2001). 개인 기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0년 기부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움.

- Andreoni, J. (2000). *The economics of philanthropy*(No. 2). Wisconsin Madison-Social Systems.
- Auten, E., Sieg, H. & Clotfelter, T. (2002).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 An analysis of panel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371-382.
- Bekkers, R. & Wiepking, P. (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Available at SSRN 1015507.
- Bekkers, R. & Schuyt, T. (2008). And who is your neighbor? Explaining denominational differences in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50(1), 74-96.
- Belfield, R. & Beney, P. (2000). What determines alumni generosity? Evidence for the UK. *Education Economics*, 8(1), 65-80.
- Bradley, R., Holden, S. & McClelland, R. (2005). A robust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taxation on charitable contribution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3(4), 545-554.
- Breeze, B. (2004). *Widow's mite or widow's might? The relative giving of rich and poor in the UK*. In 33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Associations and Voluntary Action, Los Angeles, USA.
- Cappellari, L., Polachek, W. & Tatsiramos, K. (eds). (2016). *Income Inequality Around the World (Vol. 44)*. Emerald Group Publishing.
- Choi, G. & DiNitto, M. (2012). Predictors of time volunteering, religious giving, and secular giving: Implication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J. Soc. & Soc. Welfare*, 39, 93.
- Independent Sector. (2002).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 Jencks, C. (1987). Who gives to what?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321-339.
- Drennan, P. (2015). *Income Inequality: Why it Matters and why Most Economists Didn't Notice*. Yale University Press.
- Drollinger, L. (1997).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monetary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Purdue University.
- Friedman, M. (1957).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In M. Friedman(ed.),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lanville, L., Paxton, P. & Wang, Y. (2015). Social Capital and Generosity A Multilevel Analysi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0899764015591366.
- Heckman, J. (1977).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with an application to the estimation of labor supply functions).

- James, N. & Sharpe, L. (2007).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U-shaped charitable giving profil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2), 218-238.
- Johnston, C. (2005). *Perfectly legal: The covert campaign to rig our tax system to benefit the super rich and cheat everybody else*. Penguin.
- Keeley, B. (2015).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 List, A. (2011). The market for charitable giv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2), 157-180
- Mesch, J., Brown, S., Moore, I. & Hayat, D. (2011). Gender differences in charitable giv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6*(4), 342-355.
- Reddy, D. (1980). Individual philanthropy and giving behavior. Participation in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370-399.
- Rooney, M., Steinberg, S. & Schervish, G. (2001).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giving surveys: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51-568.
- Schervish, G. & Havens, J. (1995). Do the poor pay more: Is the U-shaped curve Correc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4*(1), 79-90.
- Schervish, G. & Havens, J. (2001). Extended report on the wealth with responsibility study. Boston Collage. March.
- Slotje, J. & Raj, B. (eds). (2012). *Income inequality, poverty, and economic welfar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mith, H., Kehoe, R. & Cremer, E. (1995).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Altruism and voluntary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1), 107-126.
- Van Slyke, M. & Brooks, C.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222.
- Wiepking, P. (2007). The philanthropic poor: In search of explanations for the relative generosity of lower income household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8*(4), 339-358.
- Wilhelm, O., Brown, E., Rooney, M. & Steinberg, R.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eros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10), 2146-2156.
- Yao, K. (2015). Who Gives? The Determinants of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Their Relationship. *Wharton Research Scholars*, *126*, 1-33.
- Yen, ST. 2002. An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donations in the USA. *Applied Economics Letters*, *9*, 52-65.

◀ Abstract ▶

A Study of Citizens' Giving Behavior by Income Level: Estimation of Probability and Amount of Secular Giving

Kang, Chul Hee · Park, Tae Kuen · Lee, Soo Ye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citizens' giving behavior by household income level. Particularly, it focuses on participation and amount of secular giving by using 'Social Survey' in 2011, 2013, and 2015 from the Bureau of Statistics and employing Heckman selection model for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has a proportional tendency by their income level. Similar to participation of secular giving, citizens' giving amount has also a proportional tendency by their income level. However, the degree of proportional tendency seems not to be significant in the case of amount of secular giving. This empirical analysis promotes understanding of participation and amount of secular giving by citizens' income section in Korea by showing the differences.

This paper provides meaningful empirical understanding regarding citizens' secular giving behavior by their income level. In addition, it offers important clues to motivate relevant prospective studies and develop social agenda which contribute to strengthening giving culture in Korea.

Key Words: secular giving, income level, giving participation, giving amount, heckman selection model